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건강한 복지사회, 미래의 복지한국을 꿈꾼다.

지난해 이후 복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지난 4.11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간에 복지논쟁이 불붙었고, 복지 과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소요재정을 낱낱이 계산함으로써 재원조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금년 연말의 12.19 대선을 앞두고 또 한차례의 치열한 복지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주변의 상황과 전망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와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현상을 뒤집어 보면 분배가 계속 악화되니 복지지출을 계속 늘리게 되는 것이다. 복지가 분배개선을 주도해온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분배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가 허겁지겁 뒤쫓아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물론 분배 개선은 복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시장에서의 공정분배, 시장참여 기회의 공정성,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 등이 복지정책과 잘 조화되어야 한다.

복지는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에 매달리게 되었다. 공약을 100% 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지정책의 큰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무상복지와 맞춤형복지 간의 경쟁으로 연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복지혜택에 못지않게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부상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보편복지를 주장할 것이고, 보수정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복지를 주장할 것이다. 서민중산층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니 진보공약이 민심을 얻는 데에는 유리해 보인다. 보수공약은 서민의 복지혜택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불리함을 극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복지확충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장기화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위기는 유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개방형 경제인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이때 경제적 어려움의 피해자는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실업이 늘 것이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기업의 담세여력을 떨어뜨린다. 엄밀히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대부분은 비교적 안정된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복지확충도 힘들게 된다. 위기시에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미래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래 생산인구가 줄어드니 복지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교적 낙관적인 인구전망을 하더라도 한국은 2050년에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보육투자를 할 것인가? OECD 국가중 최고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

율을 구난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늘릴 것인가? 발달의 불을 끌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할까? 급한 불도 끄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우리는 늘 어려운 난국을 기적처럼 잘 이겨내왔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독립성을 꺾기지 지켜내었고, 근대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우리는 두 번째의 기적을 이루어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독창적인 복지국가를 고안해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개방적인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공정한 기회와 분배가 보장되는 시장,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꾼다. 